



75번째 8.15를 맞이하며 :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생각한다

올해는 해방 후 일흔다섯 번째 8.15이자, 필자가 일본에서 맞이하는 마흔한 번째 8.15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절망감과 답답함으로 맞이하고 있다.

절망감이란 양국 정부 관계가 여느 때보다도 극한적인 대립으로 치달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민간 관계마저 갇히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일본 정부와 대부분의 매스컴은 한국에 “사과 피로감(お詫び疲れ)”이 만연해 있는 일본 사회를 흘끔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의사표시를 계속적이고 단호하게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 정부는 여전히 각론 부재의 총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양국의 시민 사회는 내셔널리즘을 상대화하지 못하고 여전히 국가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인상이다. 답답함은 이런 짝 막힌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상호 신뢰마저 거의 완전히 메말라 버린 상태에서 밀려온다. 옆친 데 댈친 격으로 얼마 전 한 민간 식물원이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아베 수상을 본뜬 상을 설치해서 한일 간에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민간 시설의 행동이지만 “반일종족주의”가 지난 1월 시점에서 40만 부나 팔리며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른 일본의 상황을 부추기는 모양새이다.

/ 왜 여기까지?

현재 한일관계 균열 사태에 대해서 혹자는 양국 아이덴티티의 차이를 얘기하고 혹자는 국민성을 논한다. 예를 들면 국제관계론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 입장에서 한일 관계의 악화 원인을 살펴보고 있는 아사노 교수는 동아시아란 지역적 역사공간에서 두 나라 국민 형성의 경로가 달랐기 때문에 한일 모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민족) 기억과 보편적 가치의 위상 또한 달라졌다는 흥미로운 주장

을 펴고 있다.¹ 이외에도 일본은 법적 논리를, 한국은 정서적, 규범적 논리를 전개한다며 한일관계 악화 배경을 양국의 국민성에서 찾는 것은 거의 상식화되어 버린 느낌이다.

하지만 필자로서는 어떤 속성적인 차이보다 속물적인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정말 일본 국민들은 현재의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한국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가 냉전 구도하에서 어떤 경위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여부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애매하게(玉虫色)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알고 있을까? 더구나 청구권의 포기가 외교적 보호의 포기에 그치는지 개인 청구권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및 최고재판소 역시 수차례 입장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언감생심 생각도 못 할 일이 아닐까? 양국 정부 사이에는 단지 몇 번의 합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해결”되었다는 정부 발표와 매스컴의 보도가 판단 자료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 장기적인 신뢰와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한 대가가 큰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반복되는 “해결” 보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사태로 인해 한국에 대한 높은 불신이 일본 국민들에게 쌓여 온 것이다.²

지난 학기에 필자가 담당한 현대한국을 주제로 한 학부 수업에서도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양국) 매스컴의 영향이었다. 선정적인 보도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현재의 한일 관계를 초래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선별적인 취사선택과 아울러 SNS 등을 통한 정보 취득의 다양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³

반면에 “징용공 문제를 생각하기 위한 katazuketai.jp”와 같이 현재도 해결 같이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일본인들이 있는 반면,⁴ 상당수에 달하는 아베 정부 지지세력이 존재하는데 그 사이에 ‘중간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매스컴 그리고 정부의 영향이 너무 커서 중간지대가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역시 일반 국민들에게는 정부와 언론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현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전후민주주의가 방향 없는 제자리걸음을

1 浅野豊美「日韓における内外政治構造の共振と対話の土台—和解学の観点から」『エトランデュテ』第3号(博英社, 2020)、173-199頁.

2 한국에서도 주로 아이들이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지만,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약속을 주고받을 때 “손가락을 걸고 맹세하자. 약속을 어기면 재봉바늘 천개를 먹어야 한다(「指切りげんまん 嘘ついたら針千本飲ます」)”는 무시무시한 노래를 부른다. 지금이야 그냥 노래에 불과하지만 한 번 주고받은 약속과 결정의 무게가 무거운 사회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3 다른 지적으로는 청구권 문제 등 한일 간 현안들의 세부적인 부분을 알게 되니 “이미 해결되었다”는 세간의 이해가 잘못된 것이며 일본 정부와 매스컴의 주장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양국 간의 교육의 차이, 즉 민족(주의) 교육의 한국과 거의 배우지 못하는 일본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었다. 필자에게는 표본 수는 많지 않지만 이들 일본의 젊은 세대들의 반응은 아주 신선하며 그들의 의문에 성실히 대답하는 것이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대한 ‘해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4 “「徴用工」問題を考えるためにkatazuketai.jp”사이트는 징용공 판결을 둘러싼 3가지 오해와 2가지 의문을 “깨끗이 해결하려(片付ける)” 지난 6월 14일 개설되었는데 동경대학 도노무라(外村大) 교수를 비롯해 한일관계에 대해 혁혁한 연구 업적이 있는 7명의 학자와 변호사가 감수자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사이트의 존재는 각급의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을 생각할 때 천만금의 무게가 있다 할 수 있다.

계속하고 있다. 故 가토 노리히로는 1997년 『패전후론』에서 일본의 300만 명 전사자와 2000만 명의 아시아인 전사자 중 전사를 먼저 애도한 후 일본인 전체의 역사인식을 총괄하면서 세계로 나아가자는 테제를 주장한 바 있다.⁵ 그런데 전반부는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반면, 후반부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면화된 “기억의 내전”과 일반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역사수정주의의 만개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겨우 1990년대 들어서서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 양국의 시민사회가 내셔널리즘을 상대화하지 못한 채 식민지 지배라는 과거의 부정의와 종군위안부 여성을 비롯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지 못한 점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⁶

지금까지 한국은 과거 직시를 중시하고 일본은 미래 지향을 강조한다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앞으로는 한일 간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상호 인식의 역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한국으로서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진행된 과거 청산을 금전적인 면에서 스스로 떠안은 대신, 피해자 중심주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 과거의 부정의 반성과 보편적 가치 진작을 양국이 함께 추구해 나가는 미래지향성을 선명히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과 시민사회 차원에서 다음의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한국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 하는지 확실하게 발신해야 할 것이다. 일본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위야 어떻든 일정한 금액이 한국에 전달되었는데 왜 피해 당사자들이 반복해서 배/보상 청구를 하는지, 왜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한 내부적인 조정이 안된 채 일본 정부에게 요구를 반복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특히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에서 정말 마지막 ‘해결’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만큼 그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것이 일본 국민 전체에게 가져온 충격은 한국 국민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필자는 한국이 국내법을 제정하여 (타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막을 필요는 없겠지만) 한국 정부가 한일 간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책임지고, 일본과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재교섭을 통해 양국 간 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에 한정되는 듯했던 합의 내용을 현재에서 미래로 연결되는 국제인권문제로 함께 진작해 나가도록 제안하고 싶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양국의 시민사회는 위안부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내셔널리즘을 상대화하지 못하고 그 대립의 틀에 갇혀온 지난 20년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우선 한국 국민들은 일본 국민들이 왜 얼마만큼 “사과 피로”에 빠져 있는지 알고 노력해야 한다. 점점 소수가 되어가는 (한국에서 말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 및 한국이 좋아서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일본인들뿐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한국에 호감을 갖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다수의 일본인들에게까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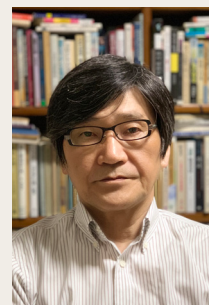
5 加藤典洋『敗戦後論』(講談社, 1997)

6 이소자키 교수는 50년간의 한일 시민사회의 상호 인식을 정리한 논문에서 위안부 문제가 처음에는 식민지 지배의 책임인 동시에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로 인식되어 한일 시민사회가 보편적 여성 인권 문제로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내셔널리즘에 가로막혀 좌초했다고 한다. 『한일관계사 1965-2015 III 사회 문화』(역사공간, 2015) 71-77쪽.

손을 잡자고 말할 수 있을지 진심으로 고민해야 한다.⁷ 수요집회가 30년 가까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가치가 왜 일본 민중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반면에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한일관계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과거 사이토 교수가 지적한 “보편적책임”을 어떻게 설명하고 떠안아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⁸ 그리고 양국의 시민단체들은 현실주의자(realists)의 국가가 단일한 주체라는 전제(unitary actor assumption)를 무개념적으로 수용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과거사 인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류’와 ‘일류’를 통해 이미 서로에 대한 친근감과 동경심이 자리 잡고 있는 한일 양국의 젊은 세대들은 양국의 신뢰를 재구축하면서 보편적 가치에 대해 교감과 연민을 같이하는 사이로 거듭날 수 있는 양질의 토양임을 강조해 두고 싶다.

7 한 일본인 학생은 사죄상에 대해서 많은 유튜브가 발언하는 동영상들을 보았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약 1000명이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지만 약 800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으며, 베스트 코멘트는 “윤미향처럼 멋대로 기부금을 썼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사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였다, 그 다음으로 “일본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같은 모습으로 그린다면 한국민도 똑같이 분노할 것이다.” 였다며, 800명이 ‘좋아요’를 누른 것에 대해서 양국 시민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감상을 일부러 보내왔다.

8 斎藤純一『政治と複雑性—民主的な公共性にむけて』(岩波書店,2008) 第8章 234쪽 이하를 참조. 사이트는 “‘일본과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것을 알게 하고 싶다.’는 김학순 할머니의 말은 집합적 책임의 차원을 넘는 (보편적 책임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한다. 237쪽.



유혁수

가나가와대학 교수/ 요코하마국립대학 명예교수

“

〈관정일본리뷰〉는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